정부, 공유경제 공급자 납세 간편화

경제활력대책회의서 활성화 방안 논의
500만원 이하 수입, 종합소득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A/S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정부가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수립했다. 공유경제가 해외에서 먼저 활성화된 만큼 국내에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던 데서 마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간편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결되도록 했다. 기존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져야 했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와 관련된 별도의 세션을 두고 세법 규정에 따른 의무와 소득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에만 적용됐지만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사후서비스(A/S) 기사 등 업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플랫폼 노동은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 고용주가 납부하던 것을, 거래 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건별 요율 체계와 관련 해선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을 발굴·추가한다.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도 데이터·보안 등 ICT 관련 분야를 추가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홍남기 "일자리 15만개 창출… 고용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고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했고 그동안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업 고용 증가 폭도 줄어드는 등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올 상반기 동안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고용창출력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청년·여성·어르신 고용상황 개선 등 3가지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7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3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인 GBC는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4년 9월 부지 매입 이후 4년 넘게 지연됐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서울시 건축허가를 마치고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단 증설도 포항시가 1월 중 부지 조성 공사를 발주, 6월까지 부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500억원 규모의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4500억원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 증설도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건설(5000억원)·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설치(2000억원)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180일 이내 한도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는 융자를 지원하고 숙박업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경제 관련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 양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 등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조건, 위약금 산정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스마트폰 및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PC의 품질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 보상기준 강화 등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폰은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많은 소비자가 2년 사용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이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아 현행 기준인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년(현행 1년)까지 늘어나도록 규정을 바꾼다. 제품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한 데스크톱 컴퓨터 메인보드가 2년인 점을 고려했다.

태블릿PC에는 품질보증 기간 1년, 부품보유 기간 4년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데스크톱 컴퓨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한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은 출발 시각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1월10일~30일)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김영태 기자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국립임실호국원 찾아 현충탑 참배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지난 9일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우정청장, 임실우체국장, 우정청 간부 등 20여명이 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임실호국원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고 우체국 사람들도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전북도민과 소통하고 국가안보 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전성무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전북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는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난 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임실우체국장, 우정청 간부 등 20여명이 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2018년 10월16일 공포, 2019년 4월17일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2019년 1월 2일~2월 11일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19년 4월 17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전북도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중소기업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자금 지원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자금 3,000억원, 기한연장 5,000억원씩 총 8,0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 모두를 포함,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자금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출상품에 따라 최고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금차 설 명절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지역경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